

10.4 남북정상선언 1주년 기념행사 특별연설

대북 정책, 근본적 전환이 필요하다

감사합니다. 우선 이 행사를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신 여러분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대체로 시절이 좀 수상해서 준비하시는 데 애로가 있었으리라고 짐작합니다. 또 오늘 이 자리에 잊지 않고 함께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역시 감사드립니다. 눈치가 조금 보이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큰 위안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기에 국민들은 매우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모두 어려우시지 않겠습니까? 설사 직접 자기 생활이 어렵지 않다 할지라도 국민들이 어려워하는 시기여서 모두 굉장히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되고 예정되지 않았다면 우리 경제에 대해서 희망 얘기 하고, 또 이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도 한번 새로 나누어보고,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이 만큼 지금 상황이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점에 대해서는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세계의 모든 경제 위기는 다 극복되어 왔습니다. 특히 우리 국민들은 역량이 우수합니다. 저는 감히 ‘우리 국민들은 탁월하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설사 다른 나라에서는 극복하기 어려운 난관이라도 우리 국민들은 능히 극복해 낼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저는 이 계

기에 하나 더 희망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이 위기를 그러저럭 극복해 가는 것이 아니라 이 경제 위기를 초래했던 경제적 사상, 정치 경제 사상과 이론을 이번에 좀 뜯어고치면서 이 고비를 넘겼으면 좋겠다. 이 위기를 계기로 해서 잘못된 정책과 제도들을 고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물론 이것은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고 보다 더 큰 세계경제의 문제이기 때문에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이제 세계의 경제를 이끌어가는 큰 나라들이 이번 이 위기를 계기로 각성하고 새로운 지혜를 모아야 되는 때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그렇게 된다면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우리 한국에게도 이 위기가 전화위복의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함께 지혜를 모아서 이 위기를 잘 넘기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준비된 대로 오늘 저는 준비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4 선언은 저희로선 참 공(功)이 많이 들어간 선언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을 모으고 정성을 모아서 열정으로 만들어 낸 그런 선언이지요. 저는 그 안의 내용이 그저 상징적인, 정치적 선전 문구로 만들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매우 구체적이고, 실용적이고 심지어는 실무적이라고까지 말하고 싶은 그런 실질적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어서 매우 가치 있는 선언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특히 남북 경제가 우리 한국 경제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 줄 것이라는 희망 때문에 이 선언은 참 의미 있는 것이라고 스스로 평가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선언은 버림받은 선언입니다. 그래서 1년쯤 되었으면 잎이 좀 더 싱싱하게 피고, 가지도 좀 무성하게 뻗고, 그래서 내년에는 열매도 주렁주렁 달렸으면 좋겠는데 이 나무가 좀 말라비틀어지고 있

습니다.

우리가 기념한다는 것은 지금이 마음 편안하고 즐겁고 내일에 대한 희망이 가득할 때, 이럴 때 기념하는 것인 줄 알았는데 저는 이 다 죽어가는 나무 하나를 놓고도 기념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서글픈 것도 기념할 수 있구나. 어쨌든 준비하신 분들 수고하셨는데 너무 김새는 말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안에서 우리가, 의미를 한번 되짚어 보면서 국민들의 역량을 모아서 희망의 불씨를 다시 한번 살려봅시다.

아직 이 나무 안 죽었거든요. 물 주고, 별이 좋으면 뿌리가 뻗어 나갈 것입니다. 또 알 수 있습니까. 내년 봄에라도 새살이 힘차게 돌아날지 알 수 없는 일이죠.

그런 희망을 가지고 오늘 저는 연재를 대북 정책으로 잡았습니다. 10.4 선언 하나만 가지고 얘기해서 뿌리가 뽑히지 않을 것 같아서, 생각의 뿌리라도 한번 뽑아보자. 그런 뜻으로 대북 정책 전반에 대해서 한번 몇 가지 생각을 다듬어 보았습니다. 대체로 근본적인 질문이 필요한 일, 또 근본적으로 사고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되는 일, 이런 몇 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해서 얘기를 구성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논리적 체계는 좀 무시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말은 하다 보면 길어지기 마련이어서 시간을 넘기지 않으려고 다듬었습니다. 계속 줄였습니다. 또 잘라내고, 또 잘라내고 계속 줄였는데도 19페이지가 가득 찼습니다. 대개 분량으로 보면 40분 분량으로 소화가 가능한 분량인데, 가득 차서 저로선 좀 부담스럽습니다. 되도록이면 시간 안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읽으면 40분 안에 충분히 들어갑니다. 그런데 듣는 분들이 40분 동안 귀담아들으려고 하면 지루하고 힘들거든요. 그래서 맛있게 양념을 조금씩 치면 시간이 더 길어집니다.

제 생각은 물리적이고 자연적인 시간 40분이 아니라, 지나가는 줄 모르게 지나가는 50분도 길지 않은데 나중에 마치고 나면 대회를 준비하셨던 분들은 ‘오늘 10분 지났으니까 앞으로 그런 일 하지 말아요’ 꼭 충고를 합니다. 저는 참모들한테 그 충고를 듣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읽어야 합니다. 혹시 가다가 양념 치느라고 시간이 가면 그때는 지루하지 않다는 표시를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원고를 오늘 준비위원회에 미리 드렸더니 너무 세다고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면서 다 이거 빼자고 합니다. 그래서 빼자고 하는 건 다 뺐습니다. 다 뺐는데, 남의 원고 손대 보면 그거 잘 안 빠집니다. 취지, 의견을 어느 정도 살리자면 빼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가시나 빼가 조금 남아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전혀 세지 않다고 생각하고 무슨 말꼬리 잡는 문화, 말꼬리 잡고 비틀고 시비하는 문화 때문에 우리가 너무 말을 조심해서 하다 보니까 빼도 없고 살도 없고 머리도 없고 꼬리도 없는 얘기들을 흔히들 하고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해 보면 민감한 얘기도 할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소화하려는 노력을 하는 성숙한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희망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북 정책 반세기, 갈등만 있고 성과는 없다

대북 정책에는 여러 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통일, 이것은 변함없는 목표이고요. 지난날에는 반공이란 목표가 있었습니다. 안보, 마찬가지로요. 근래에 와서는 화해와 협력, 평화, 공존 이런 주장이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큰 진전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진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주제입니다.

우선 세 가지 질문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일을 위해서 평화를 희생할 수도 있는가? 평화통일 과연 가능한 일인가? 통일 논의 이대로 좋은가? 이렇게 뽑아 놓고 말씀을 드리다가 나중에 다시 또 개별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일인가? 평화인가?

제가 유인물을 드렸는데 맨 앞에 ‘통일인가? 평화인가?’ 이런 중간 제목을 뽑아 났습니다. 조금 뜬금없는 얘기죠. 이것은 제가 가치의 충돌에 관한 문제를 우리가 정면으로 한번 다루어 보자 이런 뜻입니다. 지난날에는 반공도 하고, 통일도 하고 함께 외쳤습니다. 그러나 반공과 통일이 과연 양립할 수 있는 것인가? 실제로 우리는 무엇을 더 중요시해 왔던가 생각해 보면 반공한테 통일이 밀렸던 시대였던 것 같습니다. 그 시대를 저는 ‘반공의 시대’로 생각합니다. 지금은 반공보다 평화가 조금 더 대세를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평화의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평화와 통일이라는 것을 놓고, 이것을 선택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통일을 위해서 평화가 희생돼도 좋다는 그런 사고를 깔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래도 과연 좋은가. 그래서 이론적으로 통일과 평화의 가치 충돌의 문제를 한번 검토해 보자. 저는 ‘어떤 경우에도 통일이라는 명분을 내걸고 평화를 희생시킬 수는 없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제목을 뽑았습니다.

나는 평화를 통일에 우선하는 가치라고 생각한다

저는 평화를 통일에 우선하는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좀 위험한 말씀이

지만 꼭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두 개 다 이념적 가치를 표현하는 언어입니다만 그러나 통일은 보다 이념적 포장이 많은 언어이고, 평화는 이념적 포장보다는 생생하고 진실한, 절실한, 현실 그 자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평화통일의 원칙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다짐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평화를 통일에 종속되는 과정의 가치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자체 독자적인 가치로써 생각하고, 통일 전략이 있다면 평화 전략도 따로 우리가 논의하고 또 준비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통일을 위해서는 동북아시아 평화 구조가 먼저 앞서가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동북아시아 평화 구조라는 것은 또한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지 않으면 성립될 수 없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한반도 평화 정착, 동북아시아 평화 구조, 그리고 한반도의 통일 추진이라는 이런 논리적 순서를 갖는 것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평화 정책을 통일 정책의 한 부분으로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독자적인 정책으로 다뤄야 한다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평화통일, 과연 가능한 목표인가?

그다음 이제 4페이지에서 ‘평화통일 과연 가능한 목표인가?’ 라는 주제를 뽑았습니다. 물론 여러분 책하고 제가 좀 다를 것 같아서 페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평화통일 과연 가능한 목표인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두가 통일을 이야기합니다. 반세기가 넘도록 통일을 노래해 왔습니다. 그런데 통일 가능성은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너무 쉽게 그리고 무책임하게 얘기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원론적으로 얘기한다면 통일이란 두 개 이상의 국가 권력이 하나로 통합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론적으로는 국가연합, 연방, 단일국가를 신설해서 통합하는 신설 통합이나 또는 한 국가로 나머지 국가를 흡수하는 흡수 통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경우에도 국가 권력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연방제 주장이 나오고 남북 연합이라는 개념이 국가적 정책으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국가 권력의 일부를 양도하여 연방 정부 또는 연합 정부를 수립하자는 것입니다. 논리적인 원칙도 그렇습니다. 어느 개념을 채택하거나 통일을 위해서는 권력의 소멸이나 권력의 일부를 양도하는 극적인 사건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평화 통일이라는 것은 이것을 합의로 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권력을 소멸하게 하거나 양도하는 것은 국가 권력의 속성에 맞지 않습니다. 그 뿐이 아니라 국가는 가치 체계의 최상위에 있는 도덕적 실체라는 것이 근대 이래의 국가 이론입니다. 그 위에 권력은 종교 또는 이념으로 정당성을 다시 재포장합니다. 나라를 분열해서 분단 정권을 세울 때에도 이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국가 권력의 정당성이나 이념적 명분을 훼손하는 양보를 말한다는 것은 반역이 되는 것이죠.

누가 감히 여기에서 권력의 양도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인지 역사적으로 전쟁 또는 일부 국가 권력의 붕괴로 인한 통합은 있어도, 합의에 의한 통합은 그 사례를 찾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역지로 사례를 찾는다면 미국의 연방정부 수립, 유럽의 통합을 합의에 의한 통합의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경우와는 의미와 여건이 아주 다른 것이지요. 이런 국가의 사례는 분단

국가의 통합이 아닙니다.

미국의 경우는 독립 전쟁이라는 역사적 성공을 이룬 동업자들 간의 통합이었고, 유럽연합의 경우는 한발 앞선 역사적 경험을 토대로 해서 인류의 미래를 실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우는 일제 치하에서부터 치열한 이념의 대립과 분열이 있었고, 이것이 해방 정국에서 권력 투쟁으로 이어져서 마침내 분단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분단 정부의 수립 후에도 세계 냉전 체제의 최첨단에 서서, 동쪽 간에 전쟁을 치르고, 극단적 이념 대결을 벌여온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러한 역사적 조건의 차이를 극복하고 통합의 합의를 이루어 낼 수 있을 것인가. 비록 합의형 통일을 이룬 예멘의 사례가 있기는 하지만 그마저도 재분열과 무력에 의한 재통일을 한 바 있어서, 우리가 통일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역사에 유례가 없는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통일이라는 말을 그냥 할 것이 아니고, 좀 진지하게 책임 있게 얘기하는 뜻으로 통일과 통일 과정이 갖는 의미를 이렇게 한번 분석해 보았습니다. 근데 ‘이것 참 어렵다’ 얼른 들으면 ‘불가능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단호하게 ‘그래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대답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숙명입니다. 국가의 통일, 민족 통합은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지상의 이념입니다. 이것을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은 그것 또한 역사에 대한 반역입니다. 그래서 된다고 말해야 됩니다.

왜 굳이 이 말을 오늘 여기에 끄집어 넣었는가. 그것은 ‘통일을 진지하게 이야기하자. 좀 책임 있게 이야기하고, 과학적으로 이야기하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누가 과학적으로 이야기 안 하는 사람이 있냐?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통일 지상주의가 있거든요. 소위 진보주의 진영의 통일 지상주의, 낭만적 통일 지상주의라고 비아냥을 듣기도 하는 그런 운동도 있고, 국수주의 진영에도 무조건 통일을 외치는 통일 지상주의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런 경향이 없지 않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보자는 뜻으로 이런 문제를 제기해 보았습니다.

평화통일,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평화통일은 우리 민족이 거역할 수 없는 역사적 과제입니다. 그러면 평화통일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몇 가지를 짚어 보았습니다.

금기를 깨고 현실을 얘기해야 한다. 우리는 당위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두 번째는 분열의 원인이 된 요소들을 해소해야 한다. 세 번째는 국가주의 사고도 넘어설 수 있어야 한다. 세 번째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 네 번째 협상의 일반 원칙을 존중해야 된다. 다섯 번째, 종국적인 관건은 신뢰이다. 이렇게 별스럽지도 않은 제목을 뽑아놓고 조금 제가 별스럽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금기를 깨고, 현실을 말하자

금기를 깨고, 현실을 말하자. 우리의 대북 정책에는 여러 가지 금기가 있습니다. 존재하는 현실을 현실이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금기가 있습니다. 북쪽 땅에는 대한민국의 통치권이 사실상 미치지 않습니다. 북한

정권은 사실상 국가 권력입니다. 그러나 북한 땅은 우리의 영토라고 말해야 하고, 북한 정권은 반국가 단체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헌법 위반이 됩니다.

여기에 우리의 고민이 있는 것이죠. 북한 정권을 인정하거나, 그쪽을 긍정적으로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북쪽의 주장을 수용하는 말을 해서도 안 됩니다. 좌경 용공이 되고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이든 아니든 그것은 상관 없습니다.

이런 금기는 법적, 정치적 당위를 강조한 결과입니다. ‘그래야 된다’ 이 말이죠. 우리 한국 정부만이 정통이기 때문에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현실과 당위가 괴리되는 데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실을 얘기하지 않고 어떻게 상대방과 대화를 하고, 합의를 이룰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현실과 동떨어진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국민을 설득하고, 국제사회를 설득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이것은 진지하고 책임 있게 통일을 추구하는 자세가 아니다. 금기를 깨야 한다. 당위는 당위이고 현실은 현실이다. 상투적인 권력 투쟁 그리고 이념 투쟁을 넘어서야 합니다. 현실을 솔직히 받아들이고, 사실을 사실로 말하고, 상대를 상대로 인정하고, 상대의 주장도 수용할 것은 수용할 줄 알아야 한다. 그리고 통합에 필요한 일은 무엇이래도 말할 수 있게 해라. 그래야 현실적으로 통일 방안에 다가설 수 있다.

여기까지는 아직 세지 않죠? 괜찮습니까?

분단의 요인을 해소해야 한다

분단의 요인을 해소해야 합니다. 한반도의 분단은 세계의 패권 경쟁,

그리고 국제적·국내적 이념 대결의 결과입니다. 이들 분단의 원인이 해소되지 않고는 분단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이들 원인을 극복하고 해소해야 합니다.

그러자면 자주역량과 균형외교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힘만으로 세계의 패권 경쟁, 이념 대결 자체를 해소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한반도가 그 대결장이 되는 것은 막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갖추고 스스로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동북아의 질서를 대결의 질서가 아니라 화해와 협력의 구조로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방과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진영 외교, 일방 외교는 분단의 원인을 해소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분단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통합에 대한 주변 국가의 동의를 얻어내야 하는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균형 외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념 대결을 넘어서야 합니다. 이념 대결의 틀 안에서 이념 대결로 빚어진 분단을 합의로 극복한다는 것은 논리의 모순이지요. 승공통일의 사고를 넘어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사건건 시비를 하는 대결주의도 이제 그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현실을 현실로 인정하자’ 이런 뜻이지요. 그러면 북한 체제를 인정하자는 말이나. 이것은 앞으로 세계 질서에 있어서도 항상 부닥칠 수 있는 체제의 딜레마입니다. 독재 체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동안에 몇몇 강대국들은 독재 체제에 대해서 독재 체제를 해체하고 민주주의 체제로 만들기 위해서 강력한 개입주의를 펼쳐 왔습니다.

한편으론 또한 민족 자결주의를 이야기해 왔습니다. 독재 체제까지 자결의 권리가 있다고 세계의 이성이 인정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스스로 해결하게 할 것이냐, 민주주의 체제의 국가들이 연합해서 개입할 거냐. 이런 것이 사실상 존재하는 논쟁이지요. 그런데 지금까지 역사를 돌이켜보면 민주주의를 위한 개입, 체제를 민주주의로 전환하기 위한 체제 전환을 위한 개입, 무력적 개입, 공작적 개입이라는 것이 항상 침략 전쟁을 결과했다. 침략 전쟁의 명분으로 사용되어 왔다는 점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개입주의, 자결주의에 대해서 어느 쪽 한편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 영향을 미친다고 할지라도 평화적 방법으로 하자. 민주주의 사상, 민주주의 체제는 평화적으로 전파해야 한다. 이념 대결의 끝장에 있는, 앞으로 소위 이념이 다른 국가들은 서로 어떻게 문제를 풀어갈 것이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적어도 공작과 무력행사는 배제하자. 역사적으로 센 나라가 약한 나라를 지금까지 침략하고 지배했던 모든 명분은 문명이었습니다. 문명으로 야만을 개화시킨다는 것이었습니다. 요즘은 민주주의, 이념 동맹이라는 이야기를 자주 하고 있는데, 그것은 민주주의 아닌 체제를 뭔가 간섭하겠다는 것인데 간섭이든 개입이든 분명한 원칙 하나를 우린 가져야 됩니다.

무력과 공작은 배제하자. 이것은 남북문제에 있어서도 우리가 적용돼야 하는 것 아닐까, 적용됐으면 좋겠다. 평화적인 원칙으로 해야 된다. 평화적인 방법에 의한 것을 확실한 원칙으로 해 나가자. 그것이 평화통일의 본뜻 아니겠습니까?

국가주의 사고를 넘어서자

국가주의 사고라는 것을 약간 언급했습니다. 지금 우리의 가치 체계를

지배하는 사상은 국가주의입니다. 그런데 국가 간 통합이든 남북 간 통합이든 통합에는 그와 같은 사고를 뛰어넘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으로 한마디 넣어놨습니다. 유인물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쟁의 수준을 높여야 한다

그다음에 정쟁의 수준을 높여야 한다 했습니다. 이걸 ‘정치의 수준을 높여야 한다’ 라고 제목을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쟁이 뭐니까? 정치가, 권력이 정쟁이지요. 그러니까 정치의 수준을 높이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남북통일은 민족의 지상 과제입니다. 그러므로 정파적 이해관계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정파가 초당적 협력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막상 부닥쳐 보면 사사건건 치열한 정쟁이 되고 맙니다. 당연하다고 할 수 있지요. 통합의 전략이 다를 수 있고, 전략이 다르지 않더라도 실행 과정에 대한 비판적 접근은 야당의 당연한 권리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정치에서 대북 정책을 놓고 벌어지는 정쟁은 그런 수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전략 논쟁도 아니고, 논리적 비판도 아니고 빨갱이 만들기, 친북 좌파 만들기 같은 맹목적 이념 대결과 정치 공작의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념 대결로 생긴 분단을 넘어서자고 하면서 이념 대결에 매달리고 있는 것이죠. 민주화 이후 달라졌다고는 하지만 기본적인 사고의 구조에는 아직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정치가 이런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면 통일은 가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정치와 정쟁을 가치와 전략의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 정치인들 스스로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는데 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의 힘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

국민의 힘은 어디서 나오는가. 그것은 국민적 합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정쟁에 휘둘리지 않고, 대북 정책의 가치와 전략을 명료하게 이해하고, 이를 토대로 여론의 대세를 형성하고, 나아가서는 이를 투표 결과에 반영할 수 있는 수준에 국민의 생각이 이르렀을 때 이것을 저는 국민적 합의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권력의 속성과 정권의 욕심을 넘어서 권력을 양보하여 통합을 이루는 일은 역사에 없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일은 역사의 범치에 맞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역사는 권력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국민적 힘을 말하고 국민적 합의를 말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것은 역사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없었던 역사도 창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협상의 일반적 원칙을 존중해야 한다

다음에 협상의 일반적 원칙을 존중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남북 관계는 지금 협상 국면에 있습니다. 흔히들 외교적 수완이 어찌고 협상의 기술이 어찌고, 이런 말을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얼른 들으면 협상의 요체가 무슨 기교라는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만 그러나 저는 외교나 협상이 결코 기술이나 수완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반드시, 성공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외교적 원칙 그리고 협상의 원칙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 원칙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대를 인정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협상을 하면서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취하는 것은 그냥 모순이지요. 실제로 남북 간 협상에서는 정통성에 관련되는 발언 시비로 항상 협상 자체가 무산되거나 시간만 낭비하는 날이 일상화되어 있었습니다.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고 감정과 비난을 일삼는 일도 역시 삼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상대방의 목적과 이익을 존중해야 합니다. 협상은 상호 간의 이익을 도모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적화 통일의 목적을 존중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북쪽이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이미 현실적 역량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체제 유지를 위한 명분용 이상의 의미는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걸 존중하지 않아도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현실적 상황에 맞는 북쪽의 목적은 체제를 방어하고 유지하는 것일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존중할 것인가. 평화를 위해서는 그래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존중하면서 통일을 얘기할 수 있을 것인가. 얘기가 좀 복잡해지지요. 통일은 간단하게 말하면 정권이 하나로 되는 것인데, 북한의 체제를 존중하면서 어떻게 하나의 정권을 만들 수 있는가. 그래서 복잡해지는 것이죠. 그건 따로 이야기를 좀 하십시오. 말하자면 여기에서 통일의 개념에 대해서 복잡한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이죠. 국가 연합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이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든 최대한 존중하면서 통일을 얘기하는, 이 부분은 우리가 찾아내야 하는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성실한 자세로 합리적인 협상을 해야 됩니다. 진실을 가지고 협상에 임하고, 진실한 사실과 사리에 맞는 논리로 협상을 해야 합니다. 협상에서는 전략적 발언이 필요한 경우가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적 명분을 위한 거짓말이나 억지 주장은 협상을 매우 위태롭게 합

니다. 기 싸움 하거나 국내 정치용이나 국제 사회 명분용으로 상대를 비난하는 것은 절제해야 됩니다. 사리를 따져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는 일도 협상에 도움이 될 것인지 따져서 하는 지혜까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감정만 쌓이고 신뢰는 무너진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로는 협상의 결과는 반드시 이행이 되어야 한다. 더 설명이 필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정적인 열쇠는 신뢰이다

무엇보다도 남북 관계에 있어서 성공의 가장 결정적인 열쇠는 신뢰입니다. 오늘 축하 말씀해 주신 분들 모두가 신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매우 중요한 점을 지적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평화와 공존에 대한 신뢰, 그리고 협상에 나오는 사람이 진심을 가지고 나올 것이라는 신뢰, 그리고 이 협상에서 맺어진 약속은 반드시 지켜질 것이라는 신뢰, 이 신뢰가 모두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북한은 믿을 수 없는 상대인데, 그 믿을 수 없는 상대를 가지고 자꾸 신뢰를 얘기하니깐 ‘당신 지금 무슨 이야기냐?’ 이런 의심을 제기하는 분들이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북쪽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싶을지도 모르지요. 상호 불신인 것이죠. 이렇게 가면 우리는 대화나 협상이란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상대가 믿을 수 있는 상대냐 아니냐 가리지 않고 대화를 시작하고, 거기에서 신뢰를 축적해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모여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신뢰가 쌓일 것인가. 그것은 우리가 먼저 상대를 믿고 하

나, 둘씩 일을 착수하고 추진해 나가야 한다. 상대를 믿을 수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상대를 믿고 뭘 했는데 그 신뢰가 무너져 배반당해도 낭패되지 않을 일이 더러 있습니다. 상대가 약속을 좀 위반해도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위기에 빠지지 않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대비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이런 일부터 믿고 추진해 나가면서 하나씩 둘씩 신뢰를 쌓아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상대방도 변화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모든 문제에 있어서 역지사지하는 자세 이런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한 번 자리를 바꾸어서 생각해 보지 않으면 상대방이 계속 의심스러워지죠. 역지사지하는 노력 이런 것들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과의 전환이 필요한 구체적인 문제들을 몇 가지 살펴보자

원론적으로 몇 가지 말씀드렸습시다만 구체적으로 무슨 말이나. 제 경험을 토대로 해서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흡수통일은 평화통일인가.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은 평화통일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흡수통일을 통일 전략으로 삼아서 상대 권력의 붕괴를 추진한다면 그것은 북한을 자극해서 평화통일을 깨는 일이 될 것입니다.

탈북자 문제,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룰 때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이유가 그런 것이죠. 흡수통일은 전략으로 이해했을 때 좋지 않다는 것이죠. 만일에 북쪽이 붕괴하는 일이 생긴다면 그 결과가 어떤 방향으로 가게 될지 그것은 예측하기 어려운 위기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통제하기 어려운 재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하면 주변 국가들의 입지만 높여주는 결과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까 김원기 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남북 관계의 주도권을 주변 국가에 넘겨줘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것을 전략으로 채택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북의 붕괴를 획책하는 발언 또는 획책하는 듯 한 그런 발언과 행동을 하는 분들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생각이 조금 짧았던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국가보안법은 강기갑 대표님이 아주 세게 말씀하셔서 제가 미안하고 민망했는데요. 그 국회가 법 바꾸는 거지, 대통령이 바꾸는 거 아닙니다. 어쨌든 국가보안법에 의하면 북한은 반국가단체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를 인정할 수 없고, 이 법대로 하면 남북 간의 대화는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지요.

대답이나 토론에 나가보면 ‘연방제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끔이 아니고 반드시 있습니다. 연방제에 대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하면 당장 그때부터 시비가 되는 것이죠. 6.15 공동선언에서 언급한 연방제 문제도 언론과 국회에서 종종 시빗거리가 됩니다. 연방제 주장이 찬양 고무에 해당된다는 국가보안법의 판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법에 걸리든 안 걸리든 그 질문, 오늘 여기서 질문 안 하시겠죠? ‘연방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디 나갈 때 꼭 일이 생겨요. 토론 나갈 때 조심하십시오. 당신 연방제 어떻게 생각하냐고 질문하면 곤란합니다.

더 곤란한 질문이 있습니다. 김정일 위원장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거는 시비 걸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비틀어서 보도하려고 묻는데 만일에 ‘그 사람 어떻든 말은 합리적으로 보이더라’ 또 ‘아주 머리가 잘 돌아간다더라’ 머리가 잘 돌아간다는 말은 ‘명석하다’ 이 말 이거든요. ‘명석해 보인다’ 이런 대답하면 당장 이거는 타이틀로 뽑

히는 거지요? 그게 국가보안법의 힘입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찬양 고무가 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그러자면 그렇게 대답을 하지 않아야 하는데, ‘김정일 위원장 그 양반 약간 좀 이상한 사람 같아’ 이러면 대화가 잘 되겠습니까? 국가의 책임 있는 사람이 이런 대답을 해야 하는 상황으로 몰아가는 우리 사회적 분위기가 국가보안법의 힘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6.25 전쟁은 남침이냐, 통일전쟁이냐?’ 딱 물어요. 그거 볼 거 없이 남침이죠. 남침인데, 그 질문을 받은 사람이 하도 불쾌해 가지고 ‘왜 그걸 물어요?’ 묻는 의도가 나쁘다고. ‘그걸 왜 물어요, 뻔한 걸 가지고?’ 그랬더니 자꾸 남침이냐, 통일전쟁이냐 이런 질문을 하는 것도 국가보안법에 의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처럼 남북 대결주의를 강력하게 뒷받침하고 있는 법적 장치가 국가보안법입니다. 구체적으로 수사하고, 소추를 하고 안 하고 하는 강력한 뒷받침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 두고 통일 얘기를 국민적 합의로 만든다는 이야기는 좀 어렵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9.19 선언, 10.4 선언에 대해서 유감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9.19 선언은 북핵 문제 뿐만이 아니라 동북아 평화를 위한 구상이 들어있는 참 중요한 선언입니다. 근데 다음날 깨져 버렸습니다. BDA¹⁾에 대해서 미국이 제재 조치를 했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나서 남은 것은 핵실험이 이어졌고, 북미 회담은 2년 이상 지체되어 버렸고 지금 비싼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2007년 10.4 선언은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습시다만 어쨌든 지금 잘 안 풀러가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전임 사장이 계약을 하면 후임 사장은 이행을 하는 것이, 회사의 CEO들은 다 그리 하길래 그리 되는 줄

1)중국 마카오에 본사를 둔 방코델타아시아(Banco Delta Asia) 은행의 약자. 2005년 9월 미국은 북한의 돈 세탁 창구로 BDA를 지목하고, 자국 금융기관들과 거래를 중단시키는 등 제재 조치를 가했다.

알았어요. 회사에서 그리 안하면 부도나거든요. 근데 국가 CEO는 안 그래도 되는 줄 미처 몰랐어요. 이것은 신뢰의 문제였습니다. 지금도 상대를 자극하고, 신뢰를 흔드는 일이 참 우리 사회에는 참 많습니다.

우선 한미 동맹 얘기를 하겠습니다. 원시 대북 억지를 위해서 맺어진 것이죠. 지금도 그 목적은 유효합니다. 그러나 남북 간 국력의 차이와 냉전 구도의 변화로 인해서 대북 억지를 위한 한미 동맹의 중요성은 이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지금은 남북 대화의 국면입니다. 진정으로 대화를 성사시키고자 하는 생각이 있다면, 대북 억지를 위한 한미 동맹과 관련된 표현은 너무 그렇게 강조할 필요가 없지 않냐. 그런 절제와 요령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다가 일본까지 끌어들여서 이념과 가치를 함께하는 한·미·일 협력관계, 공조를 과시하는 것. 이걸 이념적 체제의 공조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남북 관계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특히 남북 관계에 상당히 큰 영향력이 있는 중국까지도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요령 없는 외교라고 생각합니다.

주한 미군의 역할에 대해서도 이제는 동북아의 어느 한쪽과도 적대적이지 않은 평화와 안정의 지렛대 역할에 비중을 두는 것이 현재 동북아시아의 상황에 맞고 남북 간의 대화 국면에도 적절할 것입니다. 그런데 굳이 한미 동맹과 한·미·일 이념 공조를 강조하고, 북한을 굳이 주적이라 명시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선제공격의 가능성까지 공공연하게 거론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좀 생각이 짧은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이렇게 해서 남북 간의 신뢰 있는 대화가 가능하고, 또 주변 국가의 협력을 얻고, 그렇게 동북아 평화 구조를 만들어 갈 수 있겠습

니까? 여기에다가 이제 PSI²⁾에 본격적으로 가입하고 MD³⁾까지 만일에 가담을 하게 된다면 이것은 한반도와 동북아를 대결 구도로 만들고 우리가 그 한쪽에 가담하는 뜻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좋은 전략이 아닐 것입니다.

북한은 한미 합동 군사훈련을 아주 큰 위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역지사지 해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계 5027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북한의 도발을 전제로 하고 있고,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경고성 계획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일단 북한이 의구심을 가지기에 충분한 거죠. 자극적인 내용이어서 이것도 앞으로 여러 관점에서 용의주도하게 전략적 검토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평화주의와 평화주의 전략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작계 5029라는 것은 전쟁 이외의 사유에 의한 북한의 유사시에 한미 연합군이 북한 지역에서 합동 작전을 펼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획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희 정부 시절에 미국이 한국에 제안을 했지만 한국은 이것을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작전 계획으로 성립되지 않고 했는데, 이것이 다시 작전 계획으로 발전되지 않을지 저는 걱정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이것이 작전 계획으로 발전하게 된다면 역시 북한과 중국을 자극할 만한 민감한 것이고, 대화에 장애 사유가 될 것입니다.

작계 5027은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지만은, 작계 5029는 그런 근거도 없습니다. 굳이 이런 것을 강행하는 것은 현명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역지사지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이것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

2)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3) 미국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missile defense).

도 대개 알 것 같아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나 남북 관계에서 원칙을 바로 세우고 신뢰를 유지한다는 것은 이런 전술적 가치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원칙을 말해서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상대방에게 신뢰를 주어야 합니다.

한 분 박수 치시는데, 먼저 박수 치신 분 나중에 제가 언제 조용히 한번 따로 모시겠습니다.

작전 통제권 환수, 이것은 자주 국가라면 당연히 스스로 행사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것만으로도 작전 통제권을 환수할 이유는 충분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젠가 한반도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을 하게 될 것인데요. 여기에 작통권도 가지지 않은 나라가 참여한다는 것이 시빗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북한은 한국보다 미국을 더 불신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유사시에 미국이 작통권을 행사하는 상황은 북한을 더욱 두렵게 하여 남북 간 대화와 협상이나 신뢰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동북아시아 다자 구조를 위해서는 다자 안보 대화가 필요한데, 미국이 한국군에 대한 작전 통제권을 행사하고 있는 상태라면 이 다자 구도의 대화 체제에서 미국이 너무 커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다자 체제가 균형 잡힌 대화 체제가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저는 작통권의 환수를 남북 간의 신뢰 구축의 중요한 요소로 생각하고 추진했습니다.

저는 전략적 유연성에 있어서 분명한 한계를 두었습니다. PSI 또한 북한과 물리적 충돌 가능성이 있는 조치에 대해서는 끝내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MD 얘기는 국민의 정부 이래 거절해 놓은 상태지요. 작계

5029 말씀드렸고요. 한미 군사훈련도 최대한 적게 하려고, 작게 하려고 노력했고 전반적으로 남북 간 충돌 가능성이 있거나 북한을 자극할 가능성이 있는 일들은 이렇게 피해왔습니다.

6자 회담에 나가면 그 자리에는 북한은 없지만 북한의 입장을 최대한 변호했습니다. 각종 국제회의에서 북한을 비난하는 발언이 나오면 최대한 사리를 밝혀서 북한을 변론했고, 개별 정상 회담에서도 한 시간 이상을 북한을 변호하는 데 시간을 보낸 일도 있습니다. 북한을 자극하는 발언을 최대한 절제했습니다. 때로는 자존심이 상할 때도 있었고, 그러나 그래도 절제하고 인내했습니다. 이 모두가 서로 하나도 신뢰를 가질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조그만 신뢰 하나라도 더 축적해 가기 위한 노력이었습니다.

물론 북한의 보답은 빠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렇게 해서 남북 관계가 크게 확대된 것은 사실입니다. 모든 면에 있어서 엄청나게 질적, 양적으로 확대된 것은 사실입니다. 결국은 정상 회담도 할 수 있었습니다. 9.19 선언이 예정된 시점에 즉시 정상 회담을 그쪽에서 제기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9.19 선언이 깨지고 난 다음에 다시 중단 상태로 들어갔다가 2.13 합의가 조금 진척되자 바로 정상회담을 북한에서 제안해 왔습니다. 여기에 복잡한 조건도 없었고, 복잡한 정치적 술수도 없었습니다. 그냥 ‘솔직하게 대화하자’ 그렇게 제안해 왔습니다. 이것이 그동안 이렇게 국내에서 욱먹어 가면서 신뢰를 축적해 온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정상 회담 내용의 합의도 가짓수가 많고, 참 양적으로는 굉장히 많지요. 질적으로는 내일 평가해 주십시오. BDA 사건만 아니었더라면 정상 회담은 한 2년쯤, 약 2년 빨리 열렸을 것이고, 남북 관계는 훨씬 더 앞으로 나가지 않았을까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선의 전략은 신뢰입니다.

이제는 박수 치셔도 제가 따로 조용히 대접을 안 할 겁니다. 시간이 지금 좀 넘었지요? 진즉에 많이 넘었을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서면 시간 감각이 없어지니까요. 빨리하겠습니다. 얼추 끝난 것 같습니다.

상호주의, 저는 이걸 애깃거리도 아닌데 하도 상호주의, 또는 상호주의에 근거한 시비라고 생각되는 것이 많아서 한번 넣어봤습니다. 상호주의의 기준이 뭐냐.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그렇죠. 개성공단을 상호주의로 해석하면 이게 상호주의에 맞는 겁니까, 안 맞는 겁니까? 지난번, 예를 들면 해주 공단 철도, 안변 조선 공단 이런 투자는 상호주의에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어쨌든 쓰이는 말이 그런 겁니다.

‘왜 퍼 주냐. 자존심 없냐. 왜 끌려 다니냐. 왜 본때를 보이지 않냐’ 이게 상호주의에서 비롯된 언어들인 것 같은데 이 언어들만큼 남북 관계를 지체하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굉장히 영향을 받습니다. 실제로 정책을 하시는 분들은 다른 여러 가지에서 논리적으로 토론을 하고, 반박하고, 그것을 넘어서는데 이 말 나오면 못 넘어서요. 통일부 차관님은 오셨겠죠. 통일부 공무원들도요 ‘왜 퍼주냐’ 이러면 그냥 뒷걸음질 치고. 또 ‘니넨 자존심도 없냐?’ 이러면, 신문에 그거 나오면 쥐약이에요. ‘왜 끌려다니냐’ 이러면 또 한 발자국 물러서고. 본때 보이고 싶죠. 그런데 그건 대화나 협상하는 자세가 아니거든요. 본때 보일 거 다 보여 가면서 대화하고 협상하고, 그것도 큰집에서. 말하자면 스스로 큰집이라고 생각하죠, 인구도 우리가 많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돈도 우리가 많고. 말하자면 그런 큰집다운 자세를 가지고 가야 될 쪽에서 그리 이야기합니다.

상호주의라는 말은 대결주의라는 또 다른 표현에 불과하다. 대결주의는 점잖은 말이고 쉽게 말해서 반공주의의 또 다른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용주의, 실용주의 반대말이 무슨 말이지요? 지금 이 상황에서, 대북 정책에서 실용주의의 반대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한나라당에서 말하는 실용주의의 반대말은 친북 좌파주의이고요. 그렇죠? 친북주의 아닙니까? 우리가 볼 때에는 실용주의 반대말은 반공주의거든요. 대결주의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국가보안법을 건건이 들고 나오는 것, 실용주의 맞습니까? 한·미 동맹, 한·미 동맹. 한·미·일 삼각 공조체제, 이건 실용주의 맞습니까?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강조하는 것, 그렇죠. 당연히 그런데 이게 ‘체제 경쟁하자’ 이런 뜻이거든요. 그걸 강조하는 것이 실용주의냐. 연방제 말만 나오면 시비 걸고, ‘퍼주기냐 뭐냐’ 이런 얘기들이 다 실용주의냐. 6.25 전쟁의 성격을 묻고 이런 것이.

근데 실용주의라는 말을 아무 비판 없이 불러 주는 대로 받아쓰시는 언론들이 있어요. 이것을 가려내는 것은 언론밖에 없습니다. 국민들과 언론밖에 없고. 정파적으로는 각기 자기들이, 실용주의라는 말이 매력 있는 말입니다. 국민들한테 조금 호의적으로 들리고, 인기 있는 말이기 때문에 서로 쓰려고 하지요. 국민이 가려줘야 하는 것인데, 남북 대화가 좌파 이념주의의 결과냐 아니면 실용주의의 결과냐. 이런 싸움들을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대북정책은 근본적인 사고와 자세가 중요하다

대체로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을 했습니다만, 바탕을 흐르는 것은 우리의 사고가 분단이 시작될 때의 사고, 그리고 분단 체제, 반공주의 시대의 사고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데서 대북 정책의 제자리걸음이 계속 반복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큰 틀에 있어서의 우리 사고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 남북 관계의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라는 것,

이런 것.

아무리 생각해도 별 뽕족한 내용도 아닌데 말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얘기들이 좀 더러 있습니다. 우리가 일부러 말하지 않고 피해 갔던 이야기들을 오늘 좀 꺼내봤습니다. 정면으로 이런 문제를 우리가 다루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